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과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은 한국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로서 기록될 것이다.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초등돌봄에 교육을 융합하는 새로운 개념의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23년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교육부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이번 6월말 업무가 공식 이전되었다. 또한 “가르치는 곳이지 돌보는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학교에서 초등돌봄 교실 너머 늘봄교실이 확대되는 변화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아이들인데 누구는 유치원에 가고 누구는 어린이집에 간다. 1980년대 초반 새마을유아원 도입 이후, 같은 연령대 아이들의 동선이 배우는 곳과 돌봄을 받는 곳으로 갈라진 채 거의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디가 낮고 낮지 않고를 떠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차이가 생겨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더욱 급격히 확대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서 유치원 보다는,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 확대가 쉬웠기 때문이다.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의 결과를 이제 만회하기 위한 유보통합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너무 편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체계, 돌봄과 교육이 분리된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순한 돌봄이 아닌, 아이의 성장·발달 상태에 최적화된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학적 발견이 잇달았다. 유보통합의 결과로서 어떤 체계가 어떤 명칭으로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 체계로의 변화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던 시대에서 융합되는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다. OECD에서도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융합하는 개념으로서 조기 아동교육·돌봄(ECC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네트워크 구축을 회원국 간 권장하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영유아기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과제가 있다면, 초등돌봄절벽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듯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이후에 갈 곳이

사라져 버렸다. 초등학교기에는 특히 돌봄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시기이다.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초등 ‘돌봄’ 교실의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방과후학교는 아동과 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시 역부족이었다. 돌봄의 욕구에 교육서비스를 넣으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늘봄학교가 등장하였다. 이미 2017년 이후 정치 진영을 떠나 ‘더놀이학교’, ‘전일제학교’, ‘온종일돌봄’, ‘국가책임돌봄’ 등의 명칭으로 합의를 본 주제이기도 하다.

로또보다 더 당첨되기 어렵다는 초등돌봄교실 자리를 맞벌이 부모라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기에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돌봄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방과후 과정이 그래서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방과후교실은 아이가 찾아다녀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 별 선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신청하여 오후 늦게까지 아이가 학교에 머무르기도 어렵다. 일하는 부모가 방과후학교에 오후 돌봄을 의존할 수 없다. 게다가 질적 수준도 강사 별로, 학교 별로, 지역 별로 천차만별이다.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유보통합에서 늘봄학교까지 자리를 잡으면 우리나라도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까지 사회적 교육·돌봄 체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갖는 국가가 된다. 점심만 먹고 나오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고, 학원에 보낼지 방과후학교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할지 골머리를 앓는 부모, 특히 엄마의 스트레스, 박탈감, 불안, 분노가 현실인 이상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그대로 둔 채 저출산·저출생 대응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위선이거나 바보짓이다. 게다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도 생겨났다.

돌봄 혹은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던 한국의 육아정책이 이제는 돌봄과 교육, 교육과 돌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정책의 세부 과제도 바뀌게 된다. 육아정책의 새로운 과제,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때이다.